

외국 만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

서울YMCA등 9개단체 '어린이 폭력영상물 대책위' 구성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폭력영상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들이 '어린이 폭력 영상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번에 대책위가 발족하게 된 것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KBS-2TV를 통해 방영됐던 '무적파워레인저'의 비디오 판권을 넘겨받은 '계몽아트콤'이 공영윤리위원회의 수입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에 '비디오 복제 허가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문체부가 '무적파워레인저'의 방영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폭력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불허하자 계몽아트콤이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시민단체들은 다시 계몽아트콤에 반발하고 나선 것.

이제 더이상 어린이들이 일부 방송사와 비디오업자들의 무책임과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폭력적인 영상물에 희생되도록 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따라 서울 YMCA를 비롯,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9개 시민·교육·여성단체들은 지난 2일 '어린이 폭력영상물 대책위원회'결성에 의견일치를 보고 앞으로 갈수록 상업화, 폭력화돼가는 어린이 영상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기능을 높여갈 방침이다.

대책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등 매체별 심의 기구와 심의체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무적파워레인저'의 비디오 복제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어린이 수입 영상물 심의 기구 사이에 질적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중과 방송의 수입 영상물은 공보처의 수입추천과

방송위원회의 수입심의를 거쳐 방송돼 왔으며 비디오는 공영윤리위원회의 수입심의와 문체부의 비디오 복제 허가, 다시 공영윤리본심의를 거쳐 비디오로 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영위와 방송위원회는 시리즈물의 경우 부분적인 심의만이 이루어져 전체작품의 질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리즈물의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폭력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전반부에 비교적 완화된 내용이 일단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점차로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방송사와 비디오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업계의 불만은 다시 완하로, 시민단체의 항의와 여론이 확대되면 강화로,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문제도 지



외국의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심의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적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 영상물은 성인물과 함께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외화와 어린이 만화영화의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심의되기 때문에 어린이용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의 이승정 실장은 "내년에

CATV 등 매체가 늘어 나면서 Z매체들간 경쟁으로 인해 영상물의 폭력성향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린이 영상물을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바라보는 방송사와 비디오 제작사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